

# 2025년 1/4분기 해양경찰위원회 의결안건 추진상황

## 총괄

- 1/4분기 의결안건 : 총 21건 (원안의결 16, 수정의결 4, 재상정의결 1)
  - └ 공포·시행 : 15건
  - └ 진행 중 : 6건

구분	형식	안건명	의결회기
규제심사	대통령령	○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	제116회(1.6.)
	해수부령	○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	제116회(1.6.)
	대통령령	○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	제118회(2.3.)
입법예고	대통령령	○「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안	제121회(3.4.)
	해수부령	○「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	제121회(3.4.)
재상정	해경청 예규	○「(해양경찰청) 채증활동규칙」 일부개정안	제122회(3.17.)

## 【'25.3.31. 기준】

구분 형식	총계	공포· 시행	절차 진행 중						
			소계	입법 예고	규제 심사	법제처 심사	국무 회의	국회 계류	기타 (재상정)
계	21	15	6	2	3	-	-	-	1
법률	0	0	-	-	-	-	-	-	-
대령	4	1	3	1	2	-	-	-	-
부령	3	1	2	1	1	-	-	-	-
훈령	7	7	-	-	-	-	-	-	-
예규	1	0	1	-	-	-	-	-	1
고시	0	0	-	-	-	-	-	-	-
계획	6	6	-	-	-	-	-	-	-

# 첨부

## '25년 1/4분기 해양경찰위원회 의결안건 세부 추진상황

연번	회기	안 건 명	형식	주요 내용	심의결과	소관부서	진행경과
1	제116회 (1.6.)	2025년 해양경찰 교육훈련계획(안)	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4대전략*, 12개 주요 과제로 구성</li> <li>*△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(인재개발원, 교육훈련플랫폼 구축 등) △ 실전형·핵심인재양성(글로벌 인재양성, 맞춤형 교육 강화 등) △ 통합적 교육훈련 체계 마련(교육훈련 제도정비, 훈련체계 고도화 등) △ 협력 네트워크 구축(관·학 상생기반 구축,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)</li> </ul>	원안 의결	교육훈련	25.1.10. 시행
2		2025년 선박교통관제(VTS) 시행계획(안)	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5대전략*, 17개 실천 과제 수립</li> <li>*△ 광역·통합 선박교통관제 체계 구축(동해·포항권 광역VTS 구축 등) △ 선박교통관제 시스템 고도화(빅데이터 및 AI 기술 현장도입 등) △ 선박교통관제 인적 역량 강화(신임경찰 대상 VTS 교육 확대 등) △ 제도 개선, 홍보 및 국제협력 강화(규정집 제작, 국제기구 인력파견 등) △ 선진조직 및 인력관리 체계 마련(관제과 분과 및 관제국 신설 등)</li> </ul>	원안 의결	해상교통관제	25.1.14. 시행
3		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	대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개정 「수상레저안전법」의 '보험가입관리 전산망' 운영과 관련된 규정 시행일('25.6.11.)에 맞춰 하위규정 마련</li> <li>• 시행령: 수중레저활동자에 한하여 구명조끼 대신 잠수복 착용 가능토록 개선</li> <li>• 시행령: 수상레저기구 속도 제한구역에 방파제추가</li> </ul>	원안 의결	수상레저	규제심사
4		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	부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시행규칙: 조종면허 필기·실기시험의 접수·변경을 시험시작 30분전까지 가능하도록 개선</li> </ul> <p>수정사항 가입관리전산망 이용이 곤란한 경우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</p>	수정 의결	수상레저	규제심사

5	제117회 (1.20.)	「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칙」 일부개정안	훈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경찰공무원법」 개정('24.8.14.)에 따라 변경된 용어 정비</li> <li>※ (기존) 간부후보생 → (변경)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</li> <li>• '속진형 경위임용제' 도입에 따른 교육체계 근거 마련</li> </ul>	원안 의결	교육훈련	25.2.4. 시행
6		「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」 일부개정안	대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'25년 정기직제 및 '24년 하반기 수시직제 배정 계획에 따라 '25년 1분기에 필요한 기구· 인력을 반영</li> <li>※ (주요내용) △강릉서 신설 (기구 +1서) △ 함정 도입 및 광역VTS 구축 (인력 +62명) △ 마약수사 강화 (인력 +3명) △ 파출소 경장· 경사를 경위로 직급 상향 (+34명)</li> </ul>	원안 의결	혁신행정부무	25.2.25. 시행
7		「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	부령		원안 의결	혁신행정부무	25.2.25. 시행
8	제118회 (2.3.)	2025년 수난대비집행계획	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5대 전략*, 20개 실천 과제 수립</li> <li>*△ 조직·인적 역량 고도화(긴급구조지원 체계 확충 및 전문성 강화 등) △ 현장중심 대비 체계 구축(현장대응 가이드 정비, 합동훈련 내실화 등)△ 재난대응 협력체계 확립(해양 재난구조대 조기안착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) △ 미래형 수색구조 인프라 구축(자율무인 잠수정 등 R&amp;D 지속 등) △ 국제 수색구조 협력 확대(인태전략 주요국 수색구조 협력망 확대 등)</li> </ul>	원안 의결	수색구조	25.2.11. 시행
9		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안	대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수상레저안전법」 개정에 따라 무동력수상 레저기구 운전자* 및 보험·공제회사** 대상 과태료 근거 마련</li> <li>* 주취 또는 약물복용 상태에서 조종하거나 음주 측정 거부 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</li> <li>** 보험회사가 해양경찰청 등 기관에 보험정 보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미통지 1건당 1만원 과태료 부과 (100만원 한도)</li> </ul>	원안 의결	수상레저	규제심사

10	제118회 (2.3.)	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	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4대 분야*, 13개 주요 R&amp;D사업 추진</li> <li>* △ 선제적 해양경비체계 구축(차세대 디지털VTS 서비스 및 장비개발 등) △ 현장중심 대응 기술·장비 개발(군집수색 자율 수중로봇 시스템 등) △ 新 방제 기술 개발(탄소중립 해상환경 변화에 따른 방제대응 기술 등) △ 맞춤형 첨단장비 개발 및 고도화(AI기반 재난 대응체계 CDX 기술 등)</li> </ul>	원안 의결	장비기획	25.2.10. 시행
11	제120회 (2.17.)	「해양경찰청 사무분장규칙」 일부개정안	훈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해양오염방제국 계 단위 부서 신설(+3계*)</li> <li>* 대외협력계, 방제지원계, 지도점검계</li> <li>• 해상교통관제과 계단위 부서 통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(폐지)관제기술개발계,</li> <li>(변경)관제교육훈련계→관제협력계</li> </ul> </li> <li>•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사무조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해양경찰 관현악단 → 해양경찰악대로 용어 수정 등</li> </ul> </li> </ul>	원안 의결	혁신행정부무	25.2.25. 시행
12		「해양경찰청 위임전결규칙」 일부개정안	훈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항공, 관제, 안전 분야 사무 조정 사항 반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(신설)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사무 등</li> </ul> </li> <li><u>수정사항</u> 제4조, 제4조의2 조문은 전결과 위임이 모두 포함된 사항이므로 조문 제목에 위임을 추가하도록 수정</li> </ul>	수정 의결	혁신행정부무	25.2.25. 시행
13		「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안	훈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일선서 형사계(부산서: 22명)의 적정 통솔 범위 유지를 위해 분계(형사3계)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(기존)수사계, 형사계, 형사2계(형기정) → (개선)수사계, 형사1·3계, 형사2계(형기정)</li> </ul> </li> </ul>	원안 의결	혁신행정부무	25.2.25. 시행

14	제121회 (3.4.)	「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안	대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선박교통관제법」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제·개정 및 운영상 미비점* 개선 추진</li> <li>△ 운항자 교육방법 다양화, 관제 신고의무 위임규정 정비△ 영해 밖 관제수역에서 교통관제 요청절차 마련</li> <li>△ 관제시설 기술개발 추진계획 수립시기 변경(매년→5년))</li> <li>[수정사항] 항행 신고 대상을 명확히* 함</li> <li>*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정박 또는 계류 중인 선박</li> </ul>	수정 의결	선박교통관제	입법예고
15		「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안	부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선박교통관제법」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제·개정 및 운영상 미비점* 개선 추진</li> <li>△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 명확화(자격요건 중 무선종사자 추가)△ 영해 밖 관제수역 제공정보 종류 신설(해상공사·해상훈련 등)△ 국제기준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 교육과정 정비</li> </ul>	원안 의결	선박교통관제	입법예고
16		제3차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(안)	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4대 추진 전략*, 10개 추진 과제 수립</li> <li>△ 첨단기술과 협력기반 연안안전 공간 조성(미래형 관리 시스템 구축 등) △ 국민·지역과 함께하는 연안안전 관리(협업, 지킴이 운영 확대 등)</li> <li>△ DET와 트렌드를 반영한 연안안전 문화 확산(교육 확대 및 홍보 등)△ 연안안전 제도 개선(체험활동 신고, 교육 개선 및 제도 정비 등)</li> </ul>	원안 의결	해양안전	25.3.4. 시행
17		2025년 연안사고 예방 시행계획(안)	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제3차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(‘25~’29)을 구체화하는 연간 실천계획* 수립</li> <li>△ 시기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 표준화 추진 △ 기관 협업 생존수영·안전교육 확대 및 해양안전 캠페인 전개△ 체험활동 신고절차 개선 및 통제장소 무단출입 규제 강화</li> </ul>	원안 의결	해양안전	25.3.4. 시행

18	제122회 (3.17.)	「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안	훈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실종자 수색 등 수색활동 장기화 시 구조본부 비상가동 종료*에 대한 절차 규정 신설*</li> </ul>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에서 생존가능성 등 고려 심의를 거쳐 종료 [수정사항] 어색한 관용구, 한문 투 표현 수정 등	수정 의결	수색구조	25.3.31. 시행
19		「해양경찰청 전문정보관 운영규칙」 일부개정안	훈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전문정보관 자격요건*과 재인증 기간**을 개선·보완하여 전문정보관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</li> </ul> * (기존) 최근 5년간 정보부서에 근무한 기간이 2년 이상 → (개선) 정보부서 근무자 또는 정보부서 경력자 ** 2년에서 3년으로 개선하여 재인증 부담 감경	원안 의결	정보	25.4.7. 시행
20		「해양경찰청 정보경찰 활동규칙」 일부개정안	훈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(개정이유) 재증 인권 보호 강화(재증사실 고지규정 신설) 및 실효적 재증을 위한 재증반 편성을 재량사항으로 변경</li> </ul> [재상정 사유] 경찰청(육상)과 해경청(해상)의 차이점과 관련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, 목적·정의·재증의 범위 등 조문의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	원안 의결	정보	25.4.7. 시행
21		「(해양경찰청) 재증활동규칙」 일부개정안	예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(개정이유) 재증 인권 보호 강화(재증사실 고지규정 신설) 및 실효적 재증을 위한 재증반 편성을 재량사항으로 변경</li> </ul> [재상정 사유] 경찰청(육상)과 해경청(해상)의 차이점과 관련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, 목적·정의·재증의 범위 등 조문의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	재상정 의결	정보	재상정 (제125회 예정)